

# KT 노동인권보장을 위한 전북지역 대책위원회

(소속단체: 공공운수노조전북본부 공무원노조전북본부 노동당전북도당 민생경제연구소 민주노총전북본부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전교조전북지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전북도당 KT민주동지회 KT새노조 (ㄱ,ㄴ순))

담당자 이준상(전화 063 278 9331, / 팩스 063 278 9332 / 메일 onespark@chol.com)

[성명]

## 추악한 범죄를 저지른 kt노동조합 정윤모 위원장과 집행부를 규탄한다!

- 정윤모 kt노동조합 위원장은 사퇴하라! -
- 검찰은 정윤모 위원장과 관계자들을 엄정히 수사하라! -

kt노동조합을 둘러싼 추악한 비리들이 또 다시 드러났다. 노조선거 당시 예비후보의 양심선언으로 노동조합 선거과정에서 후보자 매수를 하고 이에 노동조합의 조합비를 유용한 것이다. 게다가 kt노동조합의 2009년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 찬반투표에도 부정행위가 사례가 있었음도 알려졌다. 우리는 이 같은 추악한 범죄에 분노하며 kt노동조합 정윤모 위원장과 집행부를 규탄한다!

2011년 KT노동조합위원장 선거 과정 중 예비후보였던 조일환 씨는 어제(10일) 기자회견을 통해 양심선언으로 감춰진 진실을 드러냈다. 조씨는 우선 2011년 선거 당시 정윤모 후보(현 노조위원장)가 자신을 매수한 사실을 폭로했다. 조씨는 정윤모 후보가 30평 이상의 사택과 출퇴근 차량, 3년간 노조 전임자 자리보전을 대가로 선거 중지 가처분의 취하와 노사 발전, 신임 집행부에 대한 협력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당시 정윤모 후보는 이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법무법인에서 공증까지 받았다. 게다가 이런 치졸한 뒷거래에 노조 활동을 위해 쓰여야 할 노동조합의 조합비를 사용한 사실까지 밝혀졌다. 이외에도 정윤모 위원장과 11대~12대 노조집행부 및 지방본부 위원장 등이 노조활동과 무관한 해외여행을 갔으며 이에 조합비과 유용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2009년 7월17일 kt노조의 민주노총 탈퇴 찬반투표 시 개표 부정이 있다는 점도 충격이다. 해당 투표가 진행되던 인천법인사업단지부의 투표함을 투표 종료 전 미리 개봉해 민주노총 탈퇴 반대표를 미리 준비한 찬성표로 바꿔치기했다는 것이다. 증언만으로 확인되던 일이 당사자의 폭로로 실상이 드러난 것이다. 게다가 이번 양심선언의 과정에서도 kt노조와 사측의 유착이 다시 드러나기도 했다. 조일환씨의 양심선언을

막기 위해 kt노조 간부가 사측의 경영지원실장이 ‘양심선언을 경우 해고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전한 것으로 파악된다. 황창규 회장과 경영진 역시 노동탄압을 밥 먹듯 하던 이들과 다를 바 없음이 드러난 것이다.

KT노조 정윤모 위원장과 집행부는 지금까지 노동조합의 기본적 역할조차 팽개치는 활동으로 KT노동자는 물론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에게 비판받아왔다. 2014년에는 8300명의 대규모 명예퇴직과 임금피크제를 받아들였고, 작년 노사단체협약안에는 근로기준법이 명시한 해고요건보다도 악화된 해고요건을 사측이 아닌 노조 측이 먼저 제시했다. 끝내 징계자와 비조합원을 우선 해고한다는 등의 여러 독소조항이 담긴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그밖에도 KT 사측의 노동인권탄압 경영에 맞선 KT 노동자들의 싸움에는 눈을 감았다.

노동자들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고 상대 후보를 매수하고 조합원들의 조합비를 자신의 뒷거래를 위해 유용한 이 같은 행위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노동자들의 자주성과 단결이 무엇보다 중요시 되는 노동조합에 대한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정윤모 위원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검찰이 정윤모 위원장을 구속하고 이번에 양심선언으로 드러난 모든 범죄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진실이 규명되고 책임자들이 엄정히 처벌될 때까지 연대하여 싸울 것이다.

2016. 3. 11.

## **KT 노동인권보장을 위한 전북지역 대책위원회**